

경제학

해설위원 : 장 선 구 박사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해설자에게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별 출제 분포도

구분	단원	내용	문항수
미시경제(9문항)	경제학의 기초		
	수요공급이론과 응용	[계산] 최저임금과 보조금 크기 임대료 규제 효과	3
	소비자이론	[계산] CD효용함수와 탄력성 [계산] 효용극대화(완전대체제)	2
	생산자이론	[계산] 확실성 증가와 위험프리미엄	1
	생산물시장이론	[계산] 규모수익과 생산함수	1
	요소시장이론/소득분배	[계산] 3급 가격차별 VMP과 노동수요	1
	후생경제학과 시장실패	[계산] 외부불경제와 독점 [계산] 오염배출권	2
미시경제 신영역			
거시경제(11문항)	국민소득이론		
	소비 및 투자함수론		
	화폐금융이론	효율시장가설(합리적 기대)	1
	IS-LM이론		
	총수요-총공급 이론		
	재정과 금융정책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테일러 준칙 [계산] 신용승수 [계산] 화폐공급과 이자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비교	5
실업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영향	1	
경제변동 및 경제성장	[계산] 실업률	1	
국제	국제무역이론	[계산] 비교우위와 절대우위	1
	국제금융이론	환율상승요인	1
합계			20

○ 총평

이번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와 유사한 패턴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계산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여전하며, 거시는 상대적으로 쉽고, 미시는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로는 3문제 정도(규모의 수익, 외부불경제와 독점, 오염배출권)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학의 기본이론을 제대로 숙지한 후에 기출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반복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90점 정도는 받았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시 부분 출제 특징

미시경제학은 출제 포인트가 고루 펼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최신의 경향을 받아들여서인지 시장실패의 외부성 부분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소비자선택이론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공공재와 외부성과 같은 부분에 계산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시=계산'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계산문제로 출제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경제학 객관식에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산문제를 포기하고 뒤로 미루게 되면 경제학의 장벽을 넘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거시 부분 출제 특징

거시경제학은 기존의 국민소득을 중심으로 한 IS-LM, AD-AS모형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서울시나 국가직, 지방직에는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계산문제는 늘 그렇듯이 승수를 중심으로 한 실업률, 비교우위 판단이 출제되었다. 미시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계산문제가 많은 관계로 거시는 늘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거시도 최근의 거시경제 상황을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현실감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험 대책

1. 기본기를 중시하라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본기를 중시하고, 표를 이용한 암기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시의 경우에는 보상변화를 중심으로 대체효과 소득효과 등의 내용을 암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최신의 출제경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수험생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많이 누적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감평사나 회계사 문제까지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학은 기본기가 없이 암기를 하거나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공부하면 60점을 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다 맞아야 하고, 남들이 틀리는 소위 "킬러문제"를 잘 공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킬러문제도 기본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계산문제의 비중 증가

경제학은 계산문제라고 봐도 된다. 그러나 이 계산문제가 단순히 미적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였는가를 수리적으로 묻는 것이다. 따라서 솔직해져야 한다. 내가 수학을 못해서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푸는게 아니고 사실은 경제학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이다.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계산문제를 외면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경제학 시험은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고득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산이 되었다.

3. 문제 풀이 반복반복

공무원 시험에서 경제학은 20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년 나오는 문제가 안나올 수도 있고,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해서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은 경제원론 수준이므로 광범위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다. 미시경제의 행동경제학, 법경제학, 금융투자 관련 옵션 등과 거시경제학의 금융위기와 양적완화 정책 등 최신의 내용까지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 연계된 내용들은 어렵지 않게 출제된다. 따라서 기본이 되는 전통적인 내용들을 엄청난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낯선 것을 없애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고득점의 왕도는 없다. 엄청난 연습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진리가 그대로 통한다.

✓ 혹시 공부하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듀윌 게시판이나 sunkujang@hanmail.net으로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1. 자산가격이 그 자산의 가치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를 반영한다는 이론은?
- ① 효율적 시장 가설
 - ② 공개정보 가설
 - ③ 자산시장 가설
 - ④ 위험프리미엄 가설

[정답] ①
[출제포인트] 효율시장가설과 합리적 기대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해서 저축과 투자로 중개한다. 효율시장이란 정보를 “완전하게 반영(fully reflect)한다”라는 뜻으로 구체적으로는 주어진 자산의 예상가격은 현재 가능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이용해서 얻은 최적 기대가격과 같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금융자산의 가격은 항상 기초가치 혹은 내재가치와 일치하기 때문에 초과이익도 존재할 수도 없고 정부의 개입이나 구제도 필요 없게 된다. 효율시장가설은 거시경제학에서의 합리적 기대가설의 또 다른 의미이다. 합리적 기대가설이론을 주식시장에 적용한 것이 효율시장가설이다.

효율시장가설은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도 적용된다. 효율시장가설에 따르면 내일의 환율이나 주가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오늘의 환율이나 주가일 뿐이고 다른 정보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의 가격이 내일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이는 불규칙보행가설(random walk hypothesis)과 관련이 있다.

효율시장가설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약형, 준강형, 강형 효율시장가설로 강형으로 갈수록 현재의 주가에는 내부자들(insiders)만 알고 있는 내부정보까지도 모두 반영된다는 강력한 수준의 형태이다.

2. 갑국과 을국 두 나라는 각각 A재와 B재를 생산하고 있다. 갑국은 1시간에 A재 16개 또는 B재 64개를 생산할 수 있다. 을국은 1시간에 A재 24개 또는 B재 48개를 생산할 수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갑국은 A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② 을국은 B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③ 갑국은 A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④ 양국 간 교역에서 교환비율이 A재 1개당 B재 3개일 경우, 갑국은 B재 수출국이 된다.

[정답] ④
[출제포인트] 비교우위이론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갑	을	기회비용	갑	을
A	16	24	A	64/16	48/24
B	64	48	B	16/64	24/48

생산량으로 표시된 값을 기회비용으로 바꾸면 된다. 이때 숫자가 Q이므로 ‘올라타기’접근법을 사용하면 된다. 절대우위는 생산량 Q로 나타낸 값이 클수록 절대우위가 있다. 따라서 갑은 B재에 절대우위가 있고, 을은 A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으로 바꾼 후에 값이 작은 것을 찾으면 된다. 따라서 갑은 B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은 A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① 갑국은 B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② 을국은 A재에 절대우위가 있다.
- ③ 갑국은 B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을국은 A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 ④ A재에 대한 갑국의 기회비용은 4이고, 을국은 2이므로 B재로 표현된 A재의 교역조건이 2~4사이에 있으면 두 나라는 교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때 갑국은 교역조건보다 기회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수입국(수요자)가 되고, 을국은 반대로 수출국(공급자)이 된다.

3. 어느 소비자에게 X재와 Y재는 완전대체재이며 X재 2개를 늘리는 대신 Y재 1개를 줄이더라도 동일한 효용을 얻는다. X재의 시장가격은 2만 원이고 Y재의 시장가격은 6만 원이다. 소비자가 X재와 Y재에 쓰는 예산은 총 60만 원이다. 이 소비자가 주어진 예산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때 소비하는 X재와 Y재의 양은?

	X재(개)	Y재(개)
①	0	10
②	15	5
③	24	2
④	30	0

[정답] ④
 [출제포인트] 완전대체재 효용극대화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X재와 Y재가 완전대체재관계이므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를 지닌다. 예산선도 우하향하는 직선이므로 두 직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예산선의 모든 점이 효용극대화 점이 되지만,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구석해가 되어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하게 된다. 이 식을 목적식과 제약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목적식) $U = X + 2Y$

(제약식) $M = P_X X + P_Y Y$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예산선은 $60 = 2X + 6Y$ 가 된다.

따라서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MRS_{XY})은 $MRS_{XY} = \frac{MU_X}{MU_Y} = \frac{1}{2}$

이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frac{P_X}{P_Y} = \frac{1}{3}$ 이므로 두 우하향하는 직선은 겹치지 않아 구석해

가 된다. $MRS_{XY} > \frac{P_X}{P_Y}$ 이므로 X재를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을 한번에 알 수 있고, 그 결과 X재만 구입하고 Y=0인 구석해가 된다. 모든 소득을 X재에만 지출하기 때문에 X=30, Y=0이 효용극대화 점이 된다.

4. 사람들의 선호체계가 변화하여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자. 이와 같은 막걸리 가격 상승이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균형 고용량과 균형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막걸리를 생산하는 인부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다.)

- ①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②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증가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증가한다.
- ③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증가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 ④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는 감소하여 고용량은 감소하고 임금은 감소한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VMP와 노동수요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노동시장은 파생수요의 특성을 지닌다. 막걸리 수요가 증가하여 막걸리 시장의 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는 경우, 막걸리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그 결과 막걸리를 생산하는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인 $VMP_L (= P \times MP_L)$ 이 증가한다. 따라서 막걸리의 생산량 증가는 막걸리 노동시장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노동시장의 한계생산가치(VMP_L)의 증가는 고용량을 증가시키고 임금도 증가시킨다.

5. 어느 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100명이다. 이들 중 70명은 취업자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20명일 때, 이 나라의 실업자의 수는?

- ① 30명
- ② 20명
- ③ 10명
- ④ 0명

[정답] ③

[출제포인트]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인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값이다. <그림>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 = N+E+U이다. 이때 생산가능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E)=70명, 비경제활동인구(N)=20명이므로 $100=20+70+U$ 가 되어 실업자 수(U)=10이 된다.

E(취업자)=70	U(실업자)=10
N(비경제활동인구)=20	
15세 미만 인구	

6.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독점기업을 고려하자. 외부 불경제의 크기는 이 기업의 생산량 Q에 비례하는 kQ 이다. 이 기업의 총비용은 $50+0.5Q^2$ 이고 이 시장의 수요량은 가격 P의 함수 $Q=200-2P$ 로 주어진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50이다.
- ② k=20일 때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독점기업에 kQ의 조세를 부과하면 된다.
- ③ k=25일 때 시장의 거래량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하고 있다.
- ④ 이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75로 설정할 것이다.

[정답] ②

[출제포인트] 외부불경제와 독점기업 [난이도] ★★★ [중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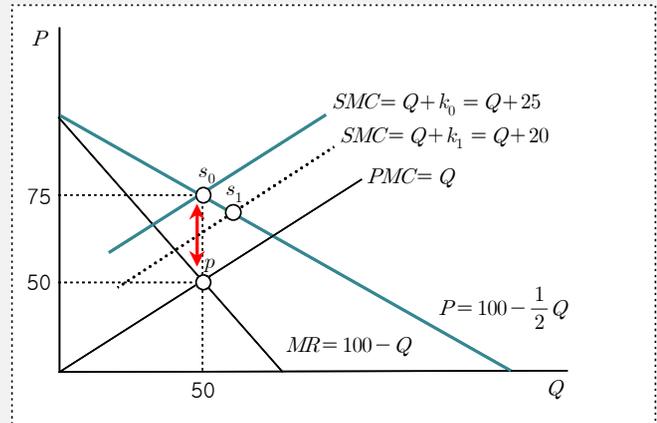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사적한계비용 : $PMC=Q$
- 사회적 한계피해액 : $SMD=k$
- 사회적 한계비용 : $SMC=Q+k$
- 기업의 수요곡선 : $P=100-\frac{1}{2}Q$
- 기업의 한계수입 : $MR=100-Q$

①, ④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PMC=MR$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고, 이를 수요함수에 대입하여 독점가격을 구하면 된다.

$PMC=MR$ 에서 $Q=100-Q$ 에서 $Q=50$ 이고,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P=75$ 가 된다.



- ② 다음 지문인 ③을 참고로 할 경우에 $k=20$ 일 경우에는 $SMC=Q+20$ 이고, $P=100-\frac{1}{2}Q$ 이므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SMC=P$ 에서 $Q+20=100-\frac{1}{2}Q$ 가 된다. 따라서 s_1 점에 해당하는 $Q=\frac{160}{3} \approx 50.3$ 가 된다. 이때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p점인 $Q=50$ 이므로 생산량이 더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생산량을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③ 사회후생극대화 생산량은 $SMC=P$ 가 된다. $k=25$ 일 때 $SMC=Q+25$ 이므로, $SMC=P$ 에서 $Q+25=100-\frac{1}{2}Q$ 가 되어 s_0 점에 해당하는 $Q=50$ 이 된다. 시장의 거래량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으로 p점에 해당하는 $Q=50$ 에서 사회후생극대화 생산량과 같다.

7. 어느 경제에서 생산량과 기술 및 요소 투입 간에 $Y = AF(L, K)$ 의 관계가 성립하며, $F(L, K)$ 는 노동, 자본에 대하여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RS)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Y, A, L, K 는 각각 생산량, 기술수준, 노동, 자본을 나타낸다.)

- ① 생산요소인 노동이 2배 증가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②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면 노동 단위 1인당 생산량은 증가한다.
- ③ 생산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각각 2배 증가하고 기술 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 ④ 생산요소인 자본이 2배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2배로 높아지면 노동 단위 1인당 생산량은 2배 증가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반영한 생산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게 된다.
 $Y = AF(L, K)$ 에서 $F(L, K)$ 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므로 $F(L, K) = L^\alpha K^\beta$ 에서 $\alpha + \beta = 1$ 인 1차동차 생산함수를 상정해 본다.
 $Y = AL^{\frac{1}{2}}K^{\frac{1}{2}} = A\sqrt{LK}$
 선지에서 노동, 자본, 기술이 증가할 때 노동 1단위당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이므로 직접 예를 들어 보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A	L	K	$Y = A\sqrt{LK}$	$\frac{Y}{L}$
기본	1	1	1	1	1
지문 ①	1	2	1	$\sqrt{2}$	$\frac{\sqrt{2}}{2}$
지문 ②	1	2	2	2	1
지문 ③	2	2	2	4	2
지문 ④	2	1	2	$2\sqrt{2}$	$2\sqrt{2}$

음영처리되어 있는 기본에서 출발해서 주어진 선지의 변화를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만 2배로 증가하게 되면 노동단위 1인당 생산량인 Y/L 은 처음의 1에서 $\frac{\sqrt{2}}{2}$ 로 그 값은 하락하게 된다.
 ② 노동과 자본만 각각 2배로 증가하게 되면 Y/L 은 이전과 같이 1로 일정하게 된다.
 ③ 노동과 자본, 기술까지 모두 2배로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생산량은 1에서 2로 2배가 된다.
 ④ 기술과 자본만 각각 2배로 증가하게 되면 1인당 생산량은 1에서 $2\sqrt{2}$ 로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8. A는 현재 시가로 1,600만 원인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도난당할 확률이 0.4라고 한다. A의 효용함수는 $U = 2\sqrt{W}$ (W 는 보유자산의 화폐 가치)이며, 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난당한 귀금속을 현재 시가로 전액 보상해준다고 한다. 보험 가입 전 A의 기대효용과 A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 ① 36 1,276만 원
- ② 48 1,024만 원
- ③ 36 1,024만 원
- ④ 48 1,276만 원

[정답] ②
[출제포인트] 확실성등가와 위험 프리미엄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현재시가로 1,600만원인 귀금속이 도난을 당하게 되면 0원이 되는데 도난을 당할 확률은 0.4이고, 도난을 당하지 않을 확률은 0.6이다.
 기대소득은 $E(W) = (0.4 \times 0) + (0.6 \times 1,600) = 960$ 이다.
 기대효용은 $E[U(W)] = [0.4 \times U(0)] + [0.6 \times U(1,600)]$
 $= [0.4 \times 0] + [0.6 \times 2\sqrt{1,600}]$
 $= 48$
 확실성 등가는 $48 = 2\sqrt{CE}$ 에서 $CE = 576$ 이다. 따라서 위험프리미엄은 $394 (= 1,600 - 960)$ 이고, 최대보험료는 $1,024 (= 1,600 - 576)$ 이 된다.

9. 인플레이션은 사전에 예상된 부분과 예상하지 못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경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 ②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 ③ 피셔(Fisher) 가설이 성립하게 된다.
 - ④ 장기계약이 만들어지기 어렵게 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인플레이션 영향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경우와 예상치 못한 경우로 그 효과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유리하고 채권자가 불리한 소득재분배가 발생하고, 화폐소득 보유자는 실물자산(부동산, 골동품 등)보유자에 비해 손해를 보게 되어 화폐 대신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어난다. 또한 장기에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이 성행하게 된다.

피셔가설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예상인플레이션율”를 나타낸다. 즉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값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 경우에는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의 차이를 정확하게 예상하고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셔가설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예상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10. 적극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의 사용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에서 정책의 동태적인 비일관성(또는 시간 비일관성)의 의미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의 집행과 효과 발생 과정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정책 당국은 시장의 암묵적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가진다.
 - ③ 정권마다 다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므로 거시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
 - ④ 시장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정책의 방향을 시의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②

[출제포인트]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고전학파가 케인즈학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태적(dynamic)이라는 것은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 한 시험에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최적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이상 최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재량적으로 근시안적인 최적정책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준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이 등장한 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케인즈 학파에 따른 재량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당국은 시장에 어떤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공표한 후에 막상 그 정책을 실시하려는 때가 되면 시장의 암묵적인 신뢰를 깨고 단기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 나아보이는 달콤한 유혹에 직면하고, 그렇게 정책을 바꾸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인센티브에 직면하게 되고 다시 재량적으로 정책을 틀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의 주장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때 잠시 근시안적으로 최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최적이지 아니란 내용이다.

- ① 정책의 시차(time-lag)와 관련한 내용이다.
- ③ 거시 경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부분은 맞지만, 정권마다 다른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다.
- ④ 시의적절하게라는 표현은 재량적인과 같은 맥락이므로 관련없다.

11.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하자.

시간당 임금(원)	6	7	8
수요량(개)	40	30	20
공급량(개)	20	30	40

시간당 최저임금을 8원으로 할 경우 발생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규모는 ㉠이고,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보조금으로 소요되는 필요 예산이 ㉡이다. ㉠과 ㉡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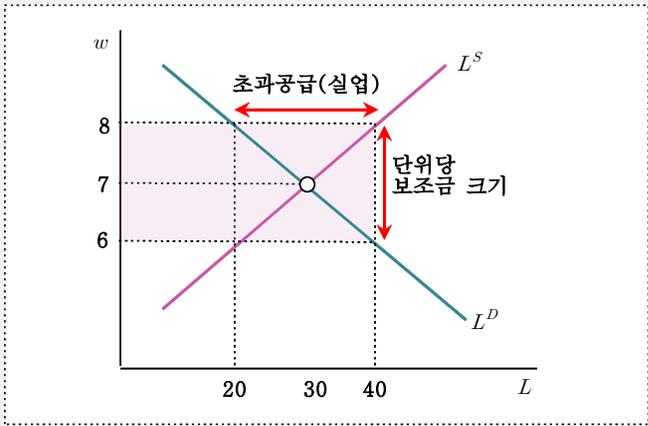
- ① 10, 20
- ② 10, 40
- ③ 20, 40
- ④ 20, 80

[정답] ④

[출제포인트] 보조금 지급 크기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8원으로 정하게 되면 초과공급이 20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때 실업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인 8원에서 노동공급량이 40만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동 수요곡선을 상방이동 시키거나 노동공급곡선을 하방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때 보조금의 크기는 단위당 2원이 된다. 따라서 필요한 총 보조금은 80(=2×40)이다.



12.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개방경제에서, <보기> 중 이 경제의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환율 상승)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
 -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 ㄷ.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위축
 - ㄹ. 자국 은행의 해외대출 증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정답] ④

[출제포인트] 환율상승요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외환시장도 시장과 동일하다. 수평축에는 거래되는 외환(달러)의 양이고, 수직축에는 외환의 가격(달러의 가격)이 된다.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ㄱ) 원유 수입액의 감소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ㄴ)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로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한다.

(ㄷ)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의 위축으로 달러가 국내 유입이 적어지면, 달러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환율은 상승한다.

(ㄹ) 자국 은행이 해외대출을 증가시키면 달러가 빠져나가 달러에 대한 공급이 감소하게 되어 환율은 상승한다.

13. 어떤 독점기업이 시장을 A와 B로 나누어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격차별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A시장의 수요 함수는 $Q_A = -2P_A + 60$ 이고 B시장의 수요함수는 $Q_B = -4P_B + 80$ 이라고 한다 (Q_A, Q_B 는 각 시장에서 상품의 총수요량, P_A, P_B 는 상품의 가격임). 이 기업의 한계비용이 생산량과 관계없이 2원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 A시장과 B시장에 적용될 상품가격은?

	A시장	B시장
①	14	10
②	16	11
③	14	11
④	16	10

[정답] ②

[출제포인트] 3급 가격차별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3급 가격차별의 문제이다. 직접 빠르게 한계비용을 도출하고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를 구하면 된다.

한계비용 $MC=2$ 로 두 시장 모두 같은 상황이다.

$$A\text{시장} : P_A = 30 - \frac{1}{2}Q_A, \quad MR_A = 30 - Q_A$$

$$B\text{시장} : P_B = 20 - \frac{1}{4}Q_B, \quad MR_B = 20 - \frac{1}{2}Q_B$$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MR=MC$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A시장은 $MR_A = MC$ 에서 $Q_A = 28$ 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P_A = 16$ 이다.

B시장은 $MR_B = MC$ 에서 $Q_B = 36$ 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수요곡선에 대입하면 $P_B = 11$ 이다.

14. 중앙은행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하에서 통화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자.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같고 현재의 생산량이 잠재생산량 수준과 같을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②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높이는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③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하는 통화정책을 펼친다.
- ④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갭과 생산량 갭이 모두 양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통화정책을 펼친다.

[정답] ③

[출제포인트] 테일러 준칙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전통적으로 통화량은 금융정책의 준칙을 논할 때 주된 대상이었으나 현재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에서 실제로 조정되는 것은 단기 이자율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금융기관 사이의 단기이자율인 콜금리를 조정하여 경제의 여러 가지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 존 테일러(J.Taylor)가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단기이자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단기이자율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하여야 한다. 이때 이자율의 상승은 통화량 감소를 의미하는데, 높은 이자율은 투자와 산출량을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둘째, 경제가 불황일 때는 이자율이 하락해야 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와 산출량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한다.

이를 반영하여 고안한 테일러 준칙의 기본식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r = r^* + \alpha(\pi - \pi^*) + \beta(Y - Y^*)$$

단, π^*, Y^* 는 각각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잠재생산량 수준을 의미한다. 문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와 같아서 $\pi = \pi^*$ 이고, 생산량도 잠재생산량과 같아서 $Y = Y^*$ 이므로 기준금리는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면 된다.

15. 최근 A는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현금 5천만 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경제의 법정지급준비율은 20%라고 할 때, 예금 창조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A의 예금으로 인해 이 경제의 통화량은 최대 2억 5천만 원 까지 증가할 수 있다.
- ㄴ.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ㄷ. 전체 통화량 가운데 민간이 현금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을 수록,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ㄹ.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황에서 법정지급준비율이 25%로 인상되면, 인상 전보다 A의 예금으로 인해 경제의 통화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③

[출제포인트] 신용승수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기본적인 승수는 두 가지 공식이 있다.(사실 동일한 것이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암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현금-통화비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m = \frac{1}{c - (1-c)z}$ 이고, 현금-예금비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m = \frac{k+1}{k+z}$ 이다.

(ㄱ) 법정지급준비율이 20%이므로 최대승수는 $c=k=0$ 인 경우로 $m = \frac{1}{z} = \frac{1}{0.2} = 5$ 가 된다. 따라서 현금 5천만원이 본원적 예금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최대로 증가 가능한 통화량은 5배인 2억 5천만원이 된다.

(ㄴ) 시중은행들이 법정지급준비금 이상으로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한다면 통화량 증가 승수는 작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초과지급준비율이 낮게 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승수는 커지게 되고 그 결과 통화량은 더 많이 늘어난다.

(ㄷ) 민간이 보유하는 현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승수는 증가하므로 예금으로 인해 더 많은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ㄹ) 법정지급준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신용승수는 작아지게 되고 통화량은 감소한다.

16. 어떤 경제의 완전고용국민소득이 400조 원이며, 중앙 은행이 결정하는 이 경제의 총화폐공급은 현재 30조 원이다. 다음 표는 이 경제의 이자율에 따른 총화폐수요, 총투자,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자율(%)	총화폐수요 (조원)	총투자 (조원)	실질국민소득 (조원)
1	70	120	440
2	60	110	420
3	50	100	400
4	40	80	360
5	30	50	320

-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수준과 같아지려면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20조 원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 ② 현재 이 경제의 실질국민소득은 완전고용수준보다 40조 원만큼 작다.
- ③ 중앙은행이 총화폐공급을 지금보다 30조 원만큼 증가 시키면 균형 이자율은 1%가 된다.
- ④ 현재 이 경제의 균형이자율은 4%이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화폐수요와 공급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완전고용국민소득은 400조이고, 현재 총화폐공급은 30조원이다. 이자율은 총화폐공급과 총화폐수요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① 실질국민소득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인 400조원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3%가 되어야 한다. 이때 총화폐수요는 50조원이다.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조원이므로 중앙은행은 총화폐공급을 화폐시장의 초과수요만큼인 20조원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조원이므로 균형에서는 총화폐수요도 30조원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자율이 5%인데, 실질국민소득은 320조원이다. 따라서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인 400조원에 80조원 만큼 미달된 상태이다.

③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조원인데, 중앙은행이 지금보다 30조원 만큼 더 증가시키게 되면 60조원이 된다. 이에 대응되는 총화폐수요 60조원에서는 이자율이 2%이다.

④ 현재 총화폐공급이 30조원이므로 화폐시장의 균형을 위해서는 총화폐수요가 30조원이 되어야 한다. 이때 이자율은 5%이다. 따라서 현재 이 경제의 균형이자율은 5%이다.

17. <보기>에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ㄱ. 암시장의 발생 가능성 증가
- 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의 감소
- ㄷ. 주택의 질적 수준의 하락
- ㄹ. 비가격 방식의 임대방식으로 임대주택의 비효율성 발생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

[출제포인트] 임대료 규제 효과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임대료의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 (ㄱ) 임대료를 규제하면 초과수요가 존재하여 암시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ㄴ) 임대료 규제는 가격인하로 공급곡선을 따라서 좌하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 (ㄷ) 임대시장은 초과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별로 시설을 깨끗하게 시설을 유지관리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가 있어 주택의 질적 수준이 하락한다.
- (ㄹ) 임대료 규제는 가격을 통제하게 되어 발생한 초과수요를 할당이나 추첨, 선착순, 로비를 통한 비리 등의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어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18.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사용을 고려한다고 하자. 이와 관련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정책의 상대적 효과는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이자율탄력성 크기와 관련이 있다.
- ② 두 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 ③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면 두 정책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④ 두 정책 간의 선택에는 재정적자의 누적이나 인플레이션 중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정답] ②

[출제포인트] 재정정책 vs 금융정책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를 감면하여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확장적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 ① 재정정책은 IS곡선이 가파를수록, LM곡선이 완만할수록 효과가 더욱 커진다.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은 완만한 형태가 되어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다.
- ②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는 정반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IS곡선을 우측이동시키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LM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 ③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정책을 같이 사용하는 정책적 혼합(policy mix)을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IS곡선이 우측이동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소득은 증가하지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어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자율의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 결과 이자율은 원래상태에서 변하지 않게 될 수 있다.
- ④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적합한지의 판단은 정부의 재정상태와 인플레이션의 심화가능성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19. 어떤 마을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총 3개 있다. 오염물 배출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각 기업이 배출하는 오염배출량과 그 배출량을 한 단위 감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업	배출량(단위)	배출량 단위당 감축비용(만 원)
A	50	20
B	60	30
C	70	40

정부는 오염배출량을 150단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그래서 각 기업에게 5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부여 하였다. 또한, 이 배출권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판매/ 구매할 수 있다.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오염 배출권 한 개당 배출 가능한 오염물의 양은 1단위 이다.)

- ① 기업 A가 기업 B와 기업 C에게 오염배출권을 각각 10단위와 20단위 판매하고,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에 형성된다.
- ② 기업 A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 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 ③ 기업 A가 기업 B에게 1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 하고, 기업 B는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한다. 이때 가격은 2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 ④ 기업 B가 기업 C에게 20단위의 오염배출권을 판매 하고, 이때 가격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된다.

[정답] ①
[출제포인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오염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데, 자신이 직접 오염을 줄이는 비용이 오염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싼 경우에는 직접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구입비용이 더 싼 경우에는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거래되는 오염배출권의 가격을 상정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초기에 정부는 개별 기업에게 50개씩의 오염배출권을 발급해주었다. 만일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의 가격이 P=35인 경우라고 가정하자. 이때 A기업은 오염감축비용이 20만원인데,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는 가격이 35만원이므로 직접 감축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용 측면에서 더 싸다. 따라서 직접 오염물질을 감축하고 오염배출권은 시장에 공급해서 판매하게 된다. B기업의 경우는 감축비용이 30만원이므로 기업 A와 마찬가지로 직접 감축하고 정부에서 받은 50개를 모두 판매해 공급하는 것이 낫다. 한편 기업 C는 감축비용이 40만원이므로 직접 감축하기보다는 오염배출권을 35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므로 시장에서 구매자로 나서게 되어 수요자가 된다. 이때 오염배출량은 70단위인데 정부에게 무상으로 받은 오염배출권 50개가 있으므로 필요한 수량인 20단위만 더 구입하면 된다. 따라서 수요는 20단위가 된다. 이처럼 배출권의 가격이 얼마로 주어진 경우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출권 가격	공급	판단	수요
P=35	A(50)+B(50)	>	C(20)
P=30	A(50)	>	C(20)
P=21	A(50)	>	B(10)+C(20)
P=20	공급 없음	<	B(10)+C(20)

만일 오염배출권 가격이 P=21만원인 경우에는 초과 공급상태가 되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P=20만원이 되면 기업 A의 경우에는 직접 오염물질을 감축하던 오염배출권을 구입하던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므로 시장에 공급량은 0에서 부터 50까지 될 수 있다. 이때 시장에서 수요량이 기업 B와 기업 C의 30이므로 A기업은 30에 맞춰 공급하게 되면 시장 가격은 20만원에서 형성되고, 균형이 형성된다. 결국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의 균형가격은 20만원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어떤 사람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의 절반을 식료품 구입에 사용한다.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작다.
 - ㄴ. 식료품의 소득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 ㄷ.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보다 크다.
 - ㄹ. 식료품의 가격 탄력성의 절댓값은 1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④
[출제포인트] 탄력성과 총수입(총지출)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득어떤 사람이 소득수준의 절반을 식료품(X)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인 경우이다.
 (목적식) $U = X^\alpha Y^\beta$
 (제약식) $M = P_X X + P_Y Y$
 효용극대화를 달성하는 $X = \frac{\alpha}{\alpha + \beta} \frac{M}{P_X}$ 이다. 이때 X재에 지출하는 비중은 $\frac{P_X X}{M} = \frac{\alpha}{\alpha + \beta}$ 이다. 만일 $\alpha = \beta = \frac{1}{2}$ 인 경우에는 소득에서 X재에 지출하는 비중이 절반(50%)이 된다.
 따라서 $X = \frac{1}{2} \frac{M}{P_X}$ 가 되는데, M, P_X 에 대한 X재의 탄력성은 모두 1이 된다.
 간략하게 변화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이다.

$$\frac{\Delta X}{X} = \frac{\Delta \frac{1}{2}}{\frac{1}{2}} + \frac{\Delta M}{M} - \frac{\Delta P_X}{P_X}$$
 탄력성을 구하는 식을 보면 가격탄력성 $\epsilon_P = \frac{\frac{\Delta X}{X}}{\frac{\Delta P_X}{P_X}} = 1$ (단, $\frac{\Delta M}{M} = 0$ 이므로)
 소득탄력성은 $\epsilon_M = \frac{\frac{\Delta X}{X}}{\frac{\Delta M}{M}} = 1$ (단, $\frac{\Delta P_X}{P_X} = 0$ 이므로)